

## UN 포스트-2015 발전어젠다 채택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草案)

### UN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 한국 고위원탁회의 건의문

2015년 9월 21일

한국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

고위원탁회의<sup>1)</sup>를 대표해서

대표 양수길

고위자문회의 의장 이흥구

회원기관 총회 회장 김영길

박근혜대통령께서 9월 25~27일 UN본부에서 개최되는 “포스트-2015 발전어젠다 채택을 위한 UN정상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을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뜻 깊은 결정으로 생각하고 환영합니다.

저희 한국SDSN은 2013년 10월 14일에 UN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sup>2)</sup>의 한국지부로 공식 발족한 이후 SDSN 추진 국제연구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의 입장에서 동 어젠다에 대한 연구 및 토론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8월 24일에는 서울 프레스 센터에서 관계 전문가들 및 시민사회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UN의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와 한국: 국가경영을 위한 활용방안과 국제개발협력 2.0의 모색”을 주제로 동 어젠다의 의의와 우리의 대응방안에 대한 종합토론을 했습니다.<sup>3)</sup> 이러한 연구·토론을 배경으로 UN의 포스트-2015 발전어젠다 혹은 그 새로운 명칭이 될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 (이하, ‘2030 어젠다’)가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 갖는 의의와 동 어젠다 출범에 대한 대한민국의 대응방안에 대한 저희들의 견해를 아래와 같이 밝히며 대통령께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 2030 어젠다의 의의 -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으로의 변환 범세계적 추진

핵심: 17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과 169개의 세부적 목표 세트

1) 명단 부록 참조.

2) 2013년 8월 19일 반기문 UN사무총장이 UN자문 글로벌 전문가네트워크로 발족시킴. Director: Jeffrey Sachs UN사무총장 MDGs담당 특별고문. [www.unsdsn.org](http://www.unsdsn.org) 참조. 한국지부로 2013년 10월 14일에 ‘한국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한국SDSN)’ 발족. 대표: 양수길 SDSN 국제전략이사 겸 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 (前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30개 회원기관(회원총회 회장: 김영길 UNAI Korea 공동대표) 및 수 천 명의 개인회원으로 참여하는 ‘포럼’으로 구성되고 80명의 전문가와 고위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고위원탁회의(의장: 이흥구 前국무총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 현재 임의조직으로 KDI대학원에 임시사무국을 두고 있음.

3) [www.sdsnk.org](http://www.sdsnk.org) 참조.

2030 어젠다는 UN 스스로가 “사람과 지구를 위한 21세기의 새로운 헌장”이라고 부를 정도로 획기적인 의미를 갖는 인류사회의 새로운 발전 비전이고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공동행동협약입니다. 동 어젠다의 핵심은 2030년까지 달성하기 위한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들(SDGs)로 구성되는 목표세트(17 SDGs와 각 목표(Goal)를 다시 몇가지 구성요소로 구분해 요소별 목표를 국가별로 계량화하도록 하는 169개의 세부목표세트(targets), <표 1> 참조)입니다. 각 목표는 글로벌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선언적 과녁이고, 각 세부목표는 글로벌하게 또는 국가별로 달성해야 하는 계량적 과녁입니다.

<표 1> 17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경제, 사회, 환경 및 거버넌스 등 4가지 차원을 조화시키는 국가와 세계 경영 추구  
SDGs는 2012년 6월의 Rio+20 UN 정상회의 이후 2년여에 걸쳐 193개 UN회원국 정부 대표들과 모든 주요 국제기구 및 세계도처의 각급 시민사회단체들이 연구, 협의, 협상을 통해 개발해온 목표세트입니다. 경제, 사회, 환경 및 거버넌스(協治) 4 차원에 걸치면서 동시적, 상호보완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최소 개수의 복합적 정책목표들로 구성됩니다. 이들 간의 불균형은 결국 국가 혹은 세계의 발전이 지속되지 못하게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되고 있습니다. 17개는 너무 많다는 것이 SDSN의 의견이지만 193개국 간 합의를 도출하다보니 그 이하로 줄이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SDSN도 UN의 사실상 think tank로서 SDGs 도출과정에서 중요한 길잡이 역할을 해 왔습니다.

#### 국가와 세계의 발전패러다임을 사람과 환경 중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행동계획

2030 어젠다의 목적은 지난 세기에 세계 여러 나라 정부가 오로지 경제성장을 위주로 국가를 경영하면서 사회공동체 구축과 지구환경 보존을 등한시함으로써 오늘날 국

가 및 인류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위기를 초래하였음을 반성하고 그 대책을 제시해 추진하는 데 있습니다. 이제부터 국가와 세계의 경영 패러다임을 “인간중심적이고 환경을 배려하는” 패러다임으로 변환(transform)시켜 나가기로 하고 이를 위해 우선 2030년까지 향후 15년에 걸치는 공동행동계획을 출범시키는 것입니다.

### **2030 어젠다는 세계 모든 나라의 발전체제를 동시에 변환시키자는 행동협약**

2030 어젠다는 세계 모든 나라의 국가경영체제를 지속가능발전 패러다임으로 변환시켜나가기 위한 행동협약입니다. 선진국들도 자국의 경영체제를 변환시켜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 어젠다가 “보편적(universal)”인 어젠다라고 UN합의문에 적시됩니다. 이것은 지속가능성 위기에 처해있거나 기여하는 것이 개도국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는 적어도 지난 수 십 년에 걸쳐 국제적 불평등을 확대시키는 동시에 여러 선진국 내에서도 불평등을 확산시켜 왔습니다. 지구환경 파괴 등으로 글로벌 지속가능성 위기에 기여하고 있는 것은 개도국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선진국들입니다.

### **사람과 환경을 등한시한 ‘발전’ - 빈곤, 사회공동체의 해체, 지구환경 파괴로 귀결**

아직도 10억에 달하는 사하라남부 아프리카 및 남아시아 등지의 인구가 1일 \$1.25이하의 소득에 의존하며 기아선상에서 헤매며 비인간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빈곤과 결핍의 문제가 방치되는 경우 인류사회의 안정과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각국에서 그리고 국제적으로 소득과 기회와 부와 권력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청년을 중심으로 한 실업문제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질병, 자연재해, 각종 갈등, 폭력, 불법이 만연하고 세계적으로 확산됩니다. 자원의 고갈, 환경의 파괴, 그리고 각종 환경적 재해에 모든 나라가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석연료 연소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과 대기 중 누적으로 인한 지구온난화가 범세계적으로 각종 재해를 초래하고 인류 문명의 존속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악화되고 확산되는 가운데 기업의 투자와 각국 경제의 성장이 활발히 유지될 수 없습니다. 사람과 환경을 등한시 하는 각국 국가경영과 ‘발전’ 추구의 결과입니다.

### **지속가능발전 위기의 구조적 원인 - 단기주의, 정부의 분절화, 공유 비전의 부재, 글로벌 협력의 미흡**

각국의 지속가능발전 위기에는 구조적 원인이 있습니다. 정부의 사고(思考)가 대통령 선거주기에 맞추어 중·단기화되는 단기주의(short-termism) 경향이 불가피해 중장기적 문제 및 해법 도출, 추진을 등한시하는 경향이 불가피합니다. 현 정부가 장기 계획을 세워도 다음 정부가 이것을 새로운 장기계획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어차피 동 계획이 신뢰 받지 못합니다. 정부 업무가 부처별로 전문화되어 있어 정부의 사고(思考)가 부처별로 시작되어 조립되는 것이 불가피한데 이 과정에서 국가정책이 부문별로 분절(分節)화되어 범국가적 차원의 통합성을 갖추는데 미흡한 ‘정부의 silo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경제문제와 사회문제와 환경문제들에 대해 통합적이기 보다 상호 경

쟁적으로 접근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아가 국가적으로 시민다수와 정치권이 공유하는 장기적 목표와 비전 및 전략이 부재해 범국가적 협력 기반의 구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게다가 글로벌한 문제에는 글로벌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데 그간 글로벌 차원의 체계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2030 어젠다의 효과성 - 통합적 범세계적 비전과 장기적 대응, 글로벌 공조의 추진, 정치적 신뢰성**

17개의 SDGs는 지속가능발전의 경제, 사회, 환경 및 거버넌스 4가지 차원을 통합적, 상호보완적으로, 또 국가별, 지역별 및 글로벌 차원에서 동시적으로 추구해 나감으로써 각국과 국제적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하자는 전략입니다. 모든 국가의 정부가 참여해 도출했으며 여기에 주요 국제기구와 국제단체 모두 그리고 각국의 시민사회도 참여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나 범세계적으로나 최상위 수준의 통합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장기적 미래를 생각하며 향후 15년의 구체적 대책들을 도출했기 때문에 단기주의 문제도 극복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컨센서스에 입각하고 있고 UN이 추진주체이기 때문에 장기 비전 및 대책으로서의 신뢰성(credibility)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성과지표 통계의 ‘세분’과 데이터 혁명의 중요성 - “아무도 낙오시키지 않겠다.”**

2030 어젠다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아무도 낙오시키지 않겠다”는 원칙입니다. 송파구 세 모녀와 같은 사각지대를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GDP 등 전통적인 거시적 성과지표에 의해 국가를 운영하는데 그치지 말고 성과지표를 성, 연령, 5분위 소득, 장애, 인종, 경제활동, 지역, 이민여부 등 여러 그룹으로 세분화(disaggregate)해 목표들을 추구합니다. 이들 성과지표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매우 방대한 통계기반이 국제적으로, 국가적으로 구축되어야 합니다. UN주도 하에 이른바 데이터 혁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 **증거기반 점검·평가(Review & Monitoring)로 이행 확인**

이를 위해 국가별 점검평가체제를 운영하고 또 지역 기구 및 UN주관 하에 지역차원의 및 글로벌 점검평가체제를 운영합니다. 이행의 점검 평가를 위해 각 세부지표에 부여된 계량적 목표치를 향한 연차적 혹은 일정기간별 이행 진도를 측정하기 위한 성과지표(indicator)들이 개발되어 이행 점검의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국가차원의 점검 평가는 연례적으로 운영됩니다. SDGs 이행체제에서 가장 중심적 부분입니다. 지역차원의 프로세스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우 UN 동아시아 경제사회위원회(ESCAP)가 운영할 수 있습니다. 상호 학습이 주목적입니다. 글로벌 점검평가는 4년 사이클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글로벌 프로세스는 UN의 ‘고위정치적포럼’(HLPF)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 **2030 어젠다는 또한 개도국의 지속적 발전을 도와주기 위한 개발협력 어젠다**

2030 어젠다는 개발도상국들이 지속가능발전 궤도에 오르도록 도와주기 위한 개발협력 어젠다이기도 합니다. 선진국들과 달리 개발도상국은 스스로 발전궤도로 오를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와주자는 것입니다. 특히 절대빈곤국민들을 구제해 주어야 합니다. 나아가 절대빈곤국을 위시해 일반 개발도상국들이 지속적 경제성장 궤도로 오르도록 도와주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재정·금융, 기술이전, 역량구축, 국제경제질서의 재편 및 글로벌 시민사회연대 등의 이행수단(Means of Implementation, MoI)을 강화해야 합니다. SDG 1~16을 지원하기 위한 MoI 강화대책이 SDG 17에 모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SDG별로 개도국의 지원을 위한 총 43개의 세부목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지난 7월 중순에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개발재정에 대한 제3차 국제회의”가 개최되어 이들 목표들의 달성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 동원 대책으로서 글로벌 차원의 각종 제도개혁방안을 담은 ‘Addis Ababa Action Agenda (AAAA)’가 채택되어 오는 UN정상회의에서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아직껏 우리 정부는 2030 어젠다를 개발협력 어젠다로만 파악**

그간 대한민국 정부는 외교부 및 환경부에서 UN의 지속가능발전어젠다 협의·협상과정에 참여해 왔는데 외교부는 동 어젠다를 개발협력어젠다로만 파악해 국제개발협력국(局)을 중심으로 대응해 왔고 환경부는 동 어젠다의 환경적 측면에만 관심을 표시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 경영패러다임 변환을 위한 어젠다로서의 활용 측면은 등한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보기에는 우리나라의 국가경영패러다임을 점검하고 정비할 필요성이 절실한데 UN의 2030 어젠다가 바로 이 필요성에 대한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국의 장기적 발전을 위협하는 요인들 - 국가경영패러다임 점검의 필요성**

저희는 우리나라가 구조적 지속가능성 위기에 갇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수많은 시민들이 이런 차원에서 국가의 미래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 **▪ 무너져 내리는 사회공동체, 구조적으로 저하되는 경제 활력**

다차원적인 양극화로 사회공동체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절대빈곤인구가 2% 가까이 되고 이들을 비롯해 여성, 아동, 장애인, 이주민 등 중 여러 소수그룹의 상당수가 아직도 사회안전망과 인권보호의 사각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집단자살한 송파구 세모녀의 비극이 이러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언젠가부터 교육제도가 사회적 상향이동을 위한 사다리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청년을 중심으로 고용 없는 경제성장이 전개되며 청년들을 절망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중산층의 살림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소득 분배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경제 활력이 계속 약화되는 가운데 사회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노인빈곤율이 40%로 OECD권 최고에 이르고 노인들을 중심으로 자살율도 OECD권 최고입

니다. 각종 차별과 불평등이 난무합니다. OECD권 여성취업율이 최하이고 남성과의 임금 격차는 최고입니다. 성폭력이 만연합니다. OECD권 최고의 자살율과 최저의 국민행복감은 국민들의 생활안정감과 정신건강과 웰빙이 매우 취약함을 말해줍니다. 대기업들은 사회적 책임감(CSR)도 아마도 선진권에서 최저일 것입니다.

■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腱) -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화(化)의 난제(難題)**

경제와 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환경적 기반도 취약합니다. 건강한 자연환경 없이는 장기적으로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견강(堅剛)한 사회공동체가 유지되지 못합니다. 역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도 에너지집약적 제품의 수출에 의존해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나라이고 산업온실가스배출 세계 7대국으로서 선진국 중 우리나라만이 화석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의 증가 없이는 경제성장을 못하는 나라입니다. 금세기 후반에 접어들며 선진국 모두 이산화탄소배출을 (純)제로화해야 합니다. 금년 12월 기후변화협약 제21차 당사국총회를 계기로 출범할 신(新)기후체제가 정립되어가면서 한국에 대해 책임 있는 기후변화행동을 촉구하는 각종 국제적 압력이 전달되어 올 것입니다. 국내에서 근본적인 대응책에 대해 고민하는 움직임이 안 보입니다. 녹색 성장이라 하던지 창조경제라 하던지 무어라하던 이산화탄소배출의 궁극적인 제로화를 위한 에너지시스템의 근본적 재편을 위한 중장기적 대책에 대해 심각하고 심층적인 연구와 토론이 없습니다. 연구계가 문제 제기 자체를 기피하는 정부를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모두 2050년까지의 대책을 생각하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뒤늦은 출발은 선택의 폭을 줄입니다.

■ **아직도 무책임한 ‘개발’ - 웰빙을 감소시키는 경제성장**

개발의 열기가 아직도 높고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경제계는 물론 정부 내에도 확산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부가 아직도 공급확대 위주의 경제 정책에 의존하고 있고 주요 부처들이 생산자 단체에 포획되어 있습니다. 유해 화학물질의 대기와 수계로의 배출이 해마다 늘고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삼림, 농지와 갯벌의 면적이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영농방식이 토양, 물, 에너지, 비료 사용 등 여러 면에서 환경적으로 매우 유해한 편입니다. 우리나라 물(水) 스트레스가 OECD국 중 가장 심합니다. 밀렵과 포획이 만연합니다. 생물의 멸종위기종이 증가일로에 있습니다. 연안의 해양건강성 지수가 전 세계 평균에도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대기 오염이 심각한 것은 중국의 화석연료 연소 탓만이 아닙니다. 각종 폐기물이 처리가 힘들 정도로 다량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자연이 훼손됩니다. GDP가 증가할수록 소중하고 보충이 어려운 자연자본스톡이 감소하고 웰빙이 저하되는 주요요인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 **국가적 대응 - 정합성, 통합성, 장기적 대책 점검 체제, 그리고 시민참여가 미흡**  
물론 정부는 이런 쑈한 문제들에 대해 열성껏 창의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당연히 중단기적 주요 현안에 집중해야 하겠습니까만 저희가 보기

에 이러한 ‘선택과 집중’ 전략을 보완해서 중장기적 지속가능발전 확인 차원에서 최소 개수의 복합적 정책목표들을 추리고 이들 목표들에 맞추어 각종 정책을 점검, 정비하고 통합적 관점에서 정합성 있게 구조적,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궤도를 수정해나가는 차원에서는 미흡하다는 판단입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각종 구조적 위기에 처해서도 공직사회는 ‘복지부동(伏地不動)’하고 정치권은 당파적 이익에 내들리고 있는 점입니다. 시민사회는 가치관의 혼란과 공유하는 국가비전의 부재 속에 분열되고 각종 이익집단에 의해 점거되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주역이 될 아동과 청소년들의 교육에도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콘텐츠가 빈약합니다. 여러 지속가능발전 위기 요인을 파악해 유효한 대책을 강구하고 추진하기 위한, 관민(官民)을 아우르는 거버넌스(協治) 기반이 취약한 것입니다.

■ **지정학적 ‘호두까기’ 구조 속 한국의 미약한 소프트파워 - 취약한 자주외교 기반**  
 대외적 여건도 전반적으로 지속가능발전에 매우 위협적입니다. 북한과의 갈등과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주변의 국제정치 구도는 주변 강대국들이 새삼 민족주의를 강화하며 구한말(舊韓末)이후 다시 한 번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자못 정치적 자주성을 위협하는 형세입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은 국제적 소프트파워를 구축하고 강화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한국은 ‘개발기여지수(CDI)’에서 선진권 최하위, ‘착한 사마리아인 평가(Brysk, 2009)’에서 남아프리카와 코스타리카도 B+를 받는데 한국은 최하위의 C를 받을 정도로 인색한 나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글로벌 리더국이 되기에는 너무 이기적인 나라라는 뜻입니다. 이래서는 국제외교 무대에서 주변 국가들에 의해 압도될 수밖에 없고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도덕적 우위를 누릴 수 없습니다. 자주적 외교의 기반이 너무 취약합니다.

## 2030 어젠다 - 한국의 대응방안

### 국가지속가능발전추진체제의 정립과 글로벌 개발협력외교의 추구

우리도 이상의 국가적 발전 위협요인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UN 2030 어젠다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고 동 어젠다를 능동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두 갈래의 대응이 요청됩니다. 무엇보다도 SDGs 체계를 최대한 활용해 우리나라의 여러 지속가능성 위협 요인들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해소해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지속가능발전 추진체제(architecture)를 점검, 정비해 운용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소프트파워의 구축과 강화를 위해 글로벌한 차원에서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 궤도로의 진입을 지원하는 글로벌 차원의 적극적 국제개발협력외교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동북아 지역의 불리한 지정학적 구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국가지속가능발전 추진체제의 정립

### 1) SDGs 체계의 조정과 정비

우선 모든 사람이 SDGs를 이해하고 그에 공감하며 국가와 세계의 미래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17개의 SDGs를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10~12개 정도로 통폐합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표현도 단순화하고 설득력 있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 성과지표세트의 개발은 2016년에 완성될 수 있을 전망이다. 통계기반의 확충은 수년을 소요할 수 있습니다.

### 2) 지속가능발전 점검추진체제(architecture)의 정비

SDGs의 이행 점검·평가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광범위하게 참여해야 합니다. 참여가 곧 힘이 됩니다. ‘다층적 이해당사자 참여원칙’(multi-stakeholder partnership) 아래 각급 지방정부, 시민사회 조직, 기업단체, 기타 이해당사자 그룹, 전문가 커뮤니티, 국회 등 모든 이해당사자들에게 점검·평가프로세스가 투명하게 개방되어야 합니다. SDGs 달성에 주요 당사자 그룹의 하나가 기업계입니다. 기업이 선도하는 사회협력 파트너십이 활성화되도록 독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특히 국회가 민의(民意) 수렴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새로운 기구들을 설치하기 보다는 가급적 기존 기구들을 재정비해 활용해야 합니다. 수많은 시민사회 조직이 최대한 활용되어야 합니다.

### 3) 대통령 주재 ‘SDGs위원회’의 설치

이러한 다층적 구조의 정점에 대통령주재 ‘SDGs위원회’(가칭)이 설치되어 이행 점검 평가 및 정책조정 과정을 총괄 기획, 조정, 추진해야 합니다. 지속가능발전은 최상위 수준의 통합적 국가경영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2008년에 이명박정부가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며 폐지했던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는 성격과 기능이 다른 것입니다. 그 이유는 UN이 말하는 ‘지속가능발전’의 의미가 포스트-2015 어젠다 도출과정에서 확연히 달라지고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동 위원회는 주로 환경보호에 심의업무의 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SDGs는 발전의 목표를 제시합니다.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전’ 간 관계에 대해서도 혼동이 있어왔습니다. 녹색성장은 SDGs 중 환경적 목표들에 대한 수단적 해법으로서 SDGs에 비해 부분적, 하부적 개념입니다. 따라서 현재 국무총리직속 녹색성장위원회를 기능적으로 ‘SDGs위원회’의 하부조직으로 편입해 운영하면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전 간의 관계가 명확해지고 이에 관한 혼동을 해소하고 녹색성장전략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 4) KDI, ‘SDGs’위원회의 지원 위한 연구 수행

‘SDGs위원회’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계에서 활발한 연구와 토론이 전개되어야 합니다. 그중 정책기관이 SDGs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연구를 주도하고 총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KDI에게 SDGs관련 연구총괄의 업무를 맡기는 방안을 건의 드립니다. 그러나 SDGs 관련 연구는 분야가 다기하고 광범위하여 시민사회 및 전문가 커뮤니티 내에서 활발한 연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격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5) SDGs의 국가경영 내 주류화 - 국가정책의 재정렬(realignment)

SDGs는 정책처방이 아닙니다. 이것은 각국 정부의 독자적 책임영역입니다. 기본적으로 각종 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점검표(checklist)이고 그 성과에 대한 성적표(scorecard)입니다. SDGs를 이처럼 활용하기 위해 SDGs를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국가 비전과 계획, 예산, 법체계 등에 반영해 국가경영에 주류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각종 정책을 재정렬하고 또 SDGs에 대한 영향에 비추어 각 정책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상호 토론을 거치며 정책의 개선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들도 SDGs를 기업 경영전략에 주류화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SDG 분야별로 다양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될 것입니다.

#### 지속가능목표 분야별 국내적 전문가 연구 및 국제연구협력의 활성화

17개 SDGs 각 부문별 지구적 문제에 대한 심층적 연구와 토론이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나 국내 전문가들에 의한 지구적 문제의 연구나 이에 관한 국제적 연구 토론에의 참여는 매우 저조합니다. 그 결과 따라 국제사회에서 지속가능발전 문제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발언권이 참으로 미약합니다. 분야별 지속가능발전 연구를 대학교와 민간 전문가 차원에서 독려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 ▪ ‘심층저탄소화경로’ 국제공동연구 참여의 필요성

그 중 가장 중요한 연구 주제가 온실가스 특히 이산화탄소배출 감축과 이를 위한 에너지시스템 재편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SDG13 ‘기후변화와의 투쟁’에 관한 것으로서 이것은 SDGs 중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목표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SDG13 내 세부목표로 “국가의 정책, 전략 및 계획에 기후변화대책을 통합하자”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이 목표는 한국에게 크나큰 난제인 이산화탄소배출 감축 대책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하고 중요한 과제로서 우리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장기적 관점에서 계획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SDSN과 프랑스의 지속가능발전연구소(IDDRI)는 세계 모든 주요 배출국이 2050까지 심층적인 저탄소화를 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우선 16개 배출대국이 참가해 이 목표의 달성을 위해 현재로부터 어떠한 시나리오에 의해 동 목표에 이를 수 있는가 그 경로를 역산 도출해 능동적 온실가스배출방안을 연구하고 이를 세계적으로 확대 전략을 연구하는 “심층저탄소화경로국제공동연구(DDPP)”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근혜대통령께서 한국이 DDPP에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기후변화 대책에 대한 국제연구협력에 적극 참여해 활용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장기적이고 창의적이며 근본적인 대책을

연구, 제시하게끔 독려하고 지원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 **‘Future Earth’ 참여의 필요성**

또 다른 경우로 UN이 환경과 기후변화가 초래할 위험으로부터 지구를 구하고 지속가능한 궤도로 전환하도록 하는 기술을 연구하도록 하기 위해 ‘Future Earth’라는 국제연구조직을 출범시키고 일본 도쿄 등 세계도처에 지역본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 연구조직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Future Earth Korea의 조성을 격려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 **‘한국SDSN’의 지원 건의**

이 건의서 작성을 실무적으로 주관하는 ‘한국SDSN’은 UN SDSN의 지부로서 동 SDSN과의 연구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문제와 과제에 대해 연구 수요가 많으나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원도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6) 지속가능발전과 글로벌 시민정신에 관한 청소년과 시민 교육의 전개**

SDGs의 실천주체는 궁극적으로 시민들입니다. 청소년을 위시해 시민 모두에게 지속가능의 문제들과 대책, SDGs 각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책임감 있는 국민과 세계시민을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인천 송도에서 개최되었던 World Education Forum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바 있던 글로벌 시민교육도 활성화해 추진하도록 격려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적극적 국제개발협력 어젠다의 추구**

한국은 1960년대 이후의 성공적 개발경험으로 잘 알려진 신흥 선진공업국으로서 개발도상국들과 선진국들 양측으로부터 기적에 가깝게 짧은 기간에 성공적 빈곤탈출과 고속 산업화를 이룬 경험을 개도국들에게 전수해 주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해 한국이 능동적, 창의적, 효과적으로 국제개발협력 어젠다를 전개하는 경우 한국은 21세기 국제사회에서 강력한 소프트파워를 구축하고 구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소프트파워의 구축과 구사는 동북지역에서 주변 강대국들이 새삼 민족주의를 강화하면서 한국을 압박해 오는 21세기의 국제정치적 여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성공적 개발경험은 이러한 적극적 국제개발협력 리더십을 위한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아래와 같은 7가지의 개발협력 이니셔티브를 고려하시도록 건의 드립니다.

**1) 아디스아바바행동협약(AAAA)의 구체화 방안 개발 주도**

지난 7월 13~16일 간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개최된 ‘개발재정에 관한 제3차 국제회의’에서는 개발도상국들의 SDGs 추구를 위한 정책전략과 재원조달에 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Addis Ababa Action Accord, AAAA)을 제시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제부터 국내외 공공자원의 동원, 국내외 민간기업과 금융의 활용, 국제개발협력, 국제무역의 활용, 부채의 활용과 관리, 국제금융시장의 규제, 과학기술혁신(STI) 및 역량 구축, 데이터, 점검·평가 등에 걸쳐 여기에 제시된 종합(綜合) 처방의 구체화 방안을 협의, 도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AAAA의 구체화방안에 관한 국제협의과정에서 과거의 발전 경험을 기반으로 창의적으로 기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을 이를 위한 국내의 연구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 2) 국내 ODA의 현대화: 과감한 증액과 집행체계의 일원화

AAAA는 각국이 ODA를 개발원조위원회(DAC)의 기준 0.7%를 지향해 증액할 것을 촉구하면서 아울러 국제적 ODA 운영체제의 ‘현대화’를 제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연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한국 자신의 ODA 증액이 요구됩니다. 한국의 ODA는 규모 면에서 현재 GNI 대비 0.13%에 머물고 있습니다. DAC 회원국 평균인 0.4%에 훨씬 미달하고 있습니다. ODA는 자선이 아니고 투자입니다. 적극적인 ODA증액계획안을 국내적으로 협의해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6년까지의 계획 및 그 후 2030년까지의 증액 원칙을 설정해 제시할 수 있습니다.

국내 ODA 집행체계가 외교부-KOICA와 기획재정부-EXIM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혼란과 낭비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를 ‘국제개발협력청’(가칭)으로 단일화해 국무조정실 산하에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3) ‘지식공유사업(KSP)’의 강화와 본격적 추진

2004년 이후 기획재정부의 후원 아래 KDI가 새마을운동 등 한국의 성공적 경제개발 정책경험을 개도국에 전수해 주는 ‘지식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artnership, KSP)’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동 사업의 내용을 새로운 SDGs에 적합하게 업그레이드하고 나아가 개발경제학적 관점에서 내용을 강화하고 전담기관을 지정해 본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KDI내 KSP를 운영하는 매우 소규모 조직인 ‘국제개발센터(IDC)’ 대신 독자적인 개발경험연구소 겸 KSP의 본격적 시행기관으로 캐나다의 국제개발연구소(IDRC)와 같은 전담기관을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의 KDI국제정책대학원을 기능적으로 확장하고 ‘국제개발교육·연구소’(가칭)로 독립시키는 방안을 검토하시도록 건의합니다. 동 기관을 빈곤개도국을 위

한 개발정책연구의 세계적 중심기관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 4) 새마을운동의 글로벌 사업화

새마을운동의 경우는 글로벌 개발협력사업으로 확대하고 전문화해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와 UN SDSN 등 글로벌 전문가네트워크와 제휴해 세계 모든 빈곤개도국에서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5) 현지 수요에 부응하는 적정기술 연구개발협력의 추진

교수의 파견 형태로 대학의 연구개발 역량을 활용해 개발도상국의 연구 인력과 함께 현지에서 필요로 하는 적정기술을 공동 연구 개발하도록 ‘적정기술연구협력센터’를 개도국 여러 곳에 설치,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시도록 건의합니다.

#### 6) 빈곤 개도국내의 경제성장궤도 진입을 위한 산업공단 설치 운영 지원

한국의 공업발전은 1962년 울산에 제1호 공업특구 설치를 계기로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빈곤개도국의 빈곤탈출은 공업생산에 기반을 둔 경제성장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의 산업화 초기 경험에 비추어 대기업의 경영자원과 중소기업들의 기술역량 및 청년인력의 경영지원 능력을 활용해 빈곤개도국에 산업공단을 설치,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기업계 전체의 전략적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사하라 남부 아프리카에는 9억에 이르는 절대빈곤인구가 모여 있습니다. 동 지역 전역에 주요 지역별로 산업공단을 설치하는 ‘뉴패러다임미래연구소’(담당 연구위원 박광기)가 제안하고 있습니다. 동 구상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 6) SDG4 ‘포용적 교육과 평생 학습기회의 보장’ 추진에 기여

SDG4는 모든 소년 소녀에게 평등하고 양질의 초·중등교육을 보장하고 모든 남녀에게 고용 및 사업에 필요한 저렴하고 질 좋은 기술교육 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합니다. 지난 5월 송도에서 개최되었던 글로벌 교육포럼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한국이 교육투자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가발전을 이루었고 교육발전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많은 도움을 받았던바 한국은 이러한 도움을 국제사회에 되돌려주기 위하여 세계의 교육현장에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히신 바 있습니다. 또 교육 발전은 반기문 UN사무총장이 가장 강조하는 목표의 하나로서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의 하나로써 SDG4의 달성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최근 ‘교육재정위원회(Commission on Education Financing)’를 설치하고 Gordon Brown UN사무총장 글로벌교육담당 고문을 그 위원장으로 위촉한 바 있습니다. Brown 위원장은 Jeffrey Sachs SDSN 총대표와 아울러 SDG4의 추진과 재정을 위해 새로운 국제기금으로 ‘글로벌교육기금

(Global Fund for Education)’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대통령께서는 한국이 SDG4를 지원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히고 정부가 ‘글로벌교육기금’ 등의 대안의 검토 협의에 참여하도록 추진하실 것을 건의합니다.

#### **7) 동아시아 차원 SDGs 이행 점검·평가프로세스를 통한 북한과의 협력 추진**

북한도 UN 회원임을 감안해 UN추진 동아시아 지역차원의 SDGs 이행점검·평가프로세스에 북한의 참여를 유도, 지원하고 나아가 북한 내지 한반도를 위한 SDGs 체계와 그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전략을 공동 연구하도록 추진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평화통일 논의의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한국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 고위원탁회의 명단

이흥구	고위자문회의 의장, 前국무총리
김영길	회원기관 총회 회장, UNAI Korea 공동회장
양수길	대표, SDSN 국제전략이사 겸 KDI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
강상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선임연구위원
강상준	국립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곽결호	안양대 석좌교수
권원태	한국기후변화학회 회장
김교성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사무총장
김부열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김선희	국토연구원 도시연구 선임연구위원
김성이	이화여대 명예교수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국장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보험금융학과 교수
김정규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 교수
김정근	강남대 실버산업학부 교수
김정훈	UN 지원 SDGs한국협회 사무대표
김진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한중	연세대 명예교수
김희집	서울대 행정대학원 초빙교수
남부원	한국YMCA 사무총장
남정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위원
노희진	KOSCOM 상임감사
류희숙	포스코경영연구소 연구위원
민경석	경북대 환경공학과 교수
박광기	뉴패러다임미래연구소 연구위원
박상용	에너지기술연구원 연구위원
박상용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박영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
박원곤	유엔아카데미임팩트(UNAI) 한국협의회 사무국장
박원훈	경기과학기술진흥원(gSTEP) 이사장
박인구	동원그룹 부회장
박인국	한국고등교육재단 사무총장
박태진	한국과학기술원(KIST) 연구전문위원
배성호	에너지기술평가원 책임연구위원
백성준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백천현	동의대 산업경영공학과 교수
서상목	지속가능경영재단 이사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손혁상	경희대 공공대학원 교수
송필배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안병옥  
 안병우  
 양이원영  
 오병용  
 왕윤종  
 위금숙  
 윤영관  
 이계우  
 이규식  
 이민화  
 이병옥  
 이상은  
 이성훈  
 이시영  
 이우성  
 이은영  
 이제훈  
 이주호  
 이태주  
 이현구  
 이현우  
 임현진  
 임홍재  
 장태평  
 전의찬  
 정의용  
 정인수  
 조용성  
 조윤제  
 최 열  
 최 용  
 최대용  
 최성수  
 최슬기  
 최재욱  
 최종찬  
 최창용  
 하지원  
 허승호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서울대 이사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  
 SK경영경제연구소 전무  
 위기관리연구소 소장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연세대 보건행정학 명예교수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석좌교수  
 세종대학교 공공대학원 산업환경학과 교수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운영위원장  
 유엔아카데미임팩트(UNAI) 한국협의회 자문위원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장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ODA Watch 대표  
 서울대 명예교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UN Global Compact Korea 사무총장  
 더푸른미래재단 이사장  
 세종대환경융합에너지학과교수, 국회기후포럼공동대표  
 아시아정당국제회의 사무총장  
 KDI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환경재단 대표  
 서울대 의과대학 명예교수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고려대 보건대학원 교수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사)에코맘코리아 대표  
 한국신문협회 사무총장